

글로벌 경제위기하의 선진국 고용전략의 시사점*

조 준 모(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1. 글로벌 경제위기의 발발과 고용위기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실물경제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이 2008년 3분기에 -0.2%에서 4분기에는 -7.1%로 나타나 세계적인 경기 대침체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IMF의 경우 2009년도 세계성장률을 지난 11월 2.2%에서 1월에는 0.5%로, 다시 3월에는 -0.5~-1.0%로 60년만의 첫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으며, 4월 들어서는 글로벌 경제회복이 하강초기부터 회복시점까지 3년 반이 걸릴 것이며 경기바닥은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아 단기급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1월 전망시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4% 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IMF의 3월 전망에 이어 OECD는 30개 회원국의 2009년도 성장률이 -4.3%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OECD 전체 실업률이 2008년 6.0%에서 2009년 8.4%로 급증하는 등 각국이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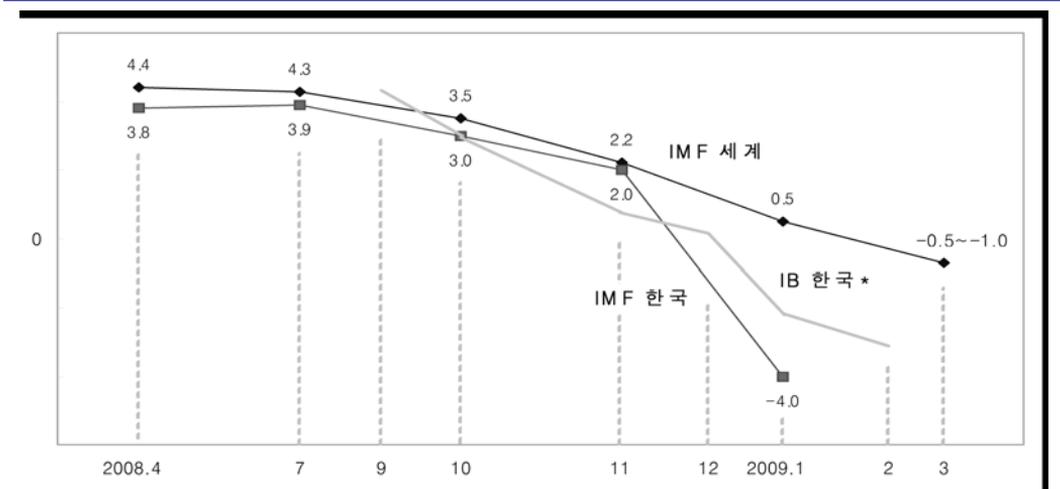
비교적 낙관론을 펴던 한국의 주요 기관들도 2009년도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바 있다. 지난 1월 KDI가 0.7% 전망치를 내놓더니 4월 들어서는 한국은행이 -2.4%, 국회에 산정정책처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추경효과가 반영된 -2.5%, -1.9%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정부를 비롯한 각 경제주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4월 들어 주가, 부동산 등이 일시적 반등을 보이는 것은 정부에 의한 유동성 공급이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데 기인한다. 반면 4월에 실업자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및

* 본 원고는 2009년 4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글로벌 경제위기하의 고용정책」 세미나 발제원고를 축약본임을 밝히둔다.

** e-mail: trustcho@skku.edu

노동시장은 엇박자로 움직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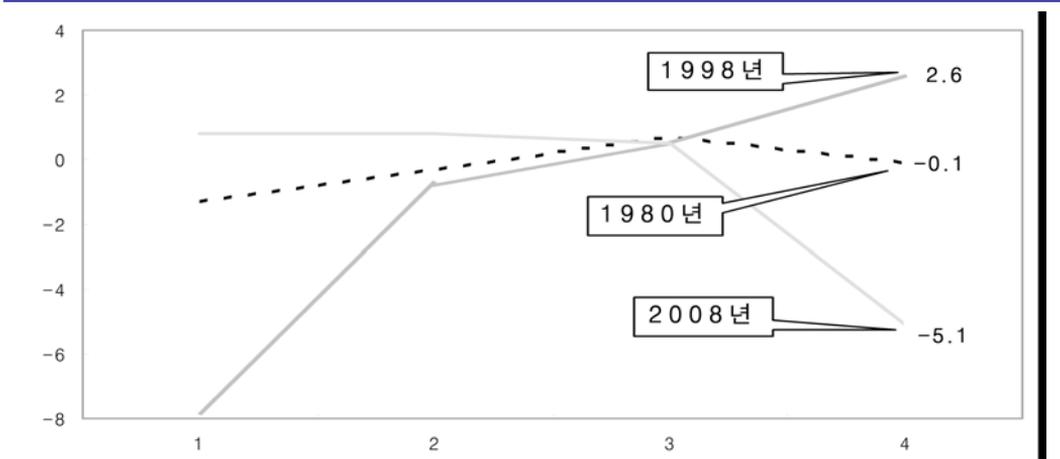
<그림 1> 전망시점에 따른 2009년 성장률 전망 추이



주: JP Morgan, Goldman Sachs,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Deutsche Bank, UBS 등 10개 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치

<그림 2> 한국의 경제위기 시기별 성장률 비교

(전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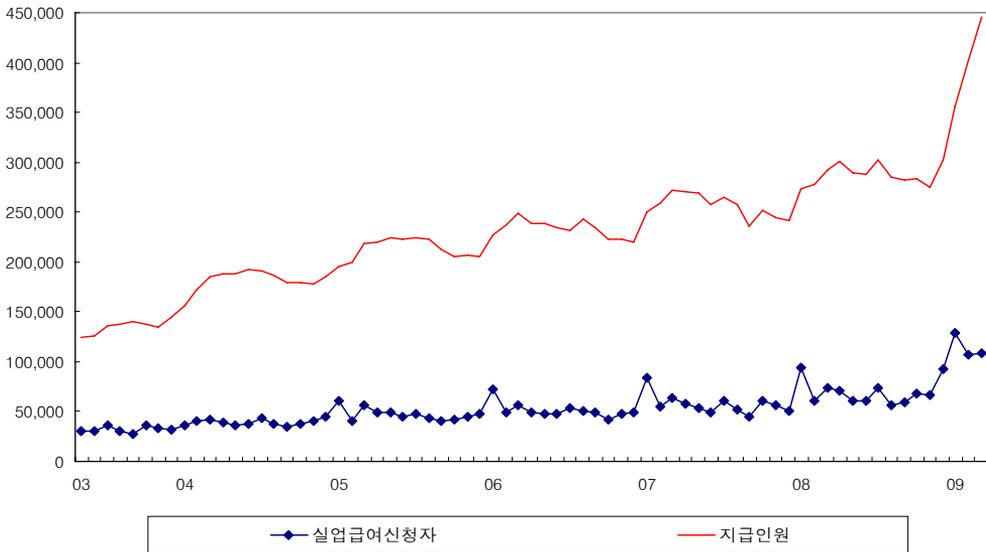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최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이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조기 경기회복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세계적으로 과다공급된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일시호황을 이끈

것으로 V자형 경기회복의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라 판단된다. 오히려 고용·소비·투자 등 실물경제지표의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버블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경기 일시반등은 V자형 회복이 아니라 W자형 쌍바닥의 1차 바닥을 경험하는 것이고 실물경제는 U자형, 노동시장은 실물경제보다 밑바닥이 넓은 욕조형(bathtub)을 경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림 3〉 한국의 월별 실업급여 추이, 2003. 5 - 2009. 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고용지표는 최근 몇 달 사이 고용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체 취업자수가 지난 3월까지 4개월 연속(전년동기비) 감소를 기록하는 가운데 사라진 일 자리의 대부분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실업률도 3년여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실업률뿐만 아니라 30대와 40대의 실업률도 같이 높아지고 있어 고용위기가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다수의 노동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거시 고용지표보다는 미시 고용지표가 현실을 실시간으로 잘 반영해 준다고 본다. 〈그림 3〉은 실업급여신청자 및 지급인원의 추이를 2003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보여주고 있다. 실업급여신청자와 지급인원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작년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월의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10만9천여명으로 전년동기비 49% 증가하였으며 지급인원 수는 44만6천여명으로 전년동기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글로벌 경제위기하의 선진국 고용전략

1) 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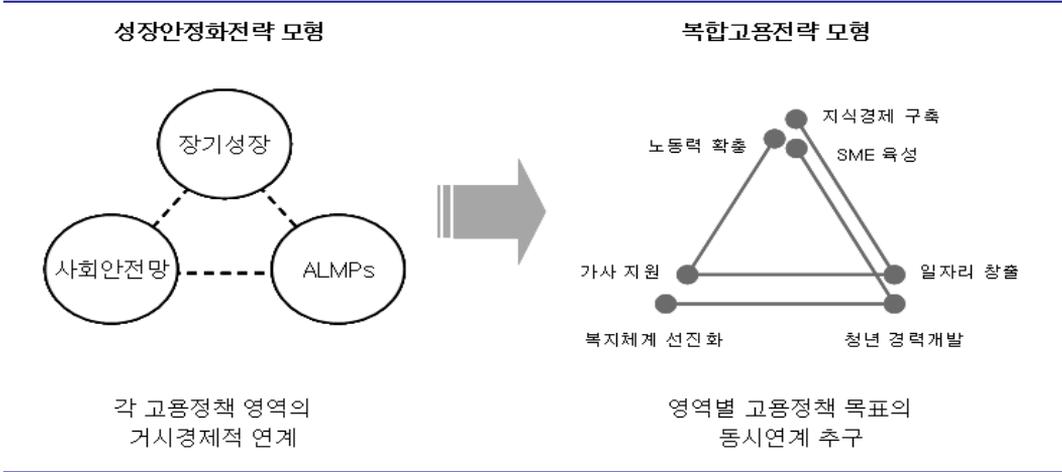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이래 주요 선진국들은 기존의 전략기조를 유지하되 다수 사례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정책패턴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불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대규모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도 총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재정확대 규모도 각국 정부가 경쟁을 하듯이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며 거시경제정책의 각국간 국제공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혀 없는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과다유동성 공급으로 인플레이션의 만연화 그리고 불황 이후 인구고령화와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재정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 활용도를 높이는 노동시장 유연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유연근로제(flexible working)의 확대시행을 검토 중에 있고 프랑스는 기간제 계약(fixed-term contract)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고용위기 상황에서는 정규직 고용보장제(EPL)완화와 같은 장기적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은 개혁보다는 유연근로나 비정규직의 활용도를 높이는 단기적 대책을 현실적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세 번째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의 정책은 중장기적이고 다소 거시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해 오다가 위기 이후에는 영역별 세부 고용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복합연계하여 추구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담보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합전략과 대비되는 전략개념으로 단선전략을 들 수 있다. 단선전략하에서는 정책의 비전과 패러다임 없이 미시 정책목표를 따로따로 설정하고 목표의 담당부처도 따로따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다보니 부처 목표간의 충돌, 예산의 중복투자, 부처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비되는 복합전략하에서는 첫째, 고용정책 목표간의 복합화를 추구한다. 예컨대 고용전략에 있어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세부목표와 고용창출이라는 목표가 상호충돌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둘째 기간 목표간의 복합화를 추구한다. 단기의 목표와 장기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됨으로써 단기목표추구가 장기목표 달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셋째, 복합전략 추구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혹은 담당부처간의 유기적인 정책조정/컨트를 타워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고용관련 복합전략의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4〉 성장안정화전략과 복합고용전략의 개념



〈표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고용전략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하 등 유동성 확대 • 공적자금으로 부실자산 매입 • 금융사 자본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하 등 유동성 확대 • 공적자금으로 부실자산 매입 • 금융사 자본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하 등 유동성 확대 • 공적자금으로 부실자산 매입 • 금융사 자본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하 등 유동성 확대 • 공적자금으로 부실자산 매입 • 금융사 자본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인하 등 유동성 확대 • 금융사 자본확충
인프라·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에 7890억달러, 최소 300만 고용 창출 • 교육, IT 등 지식인프라 구축 • 건물 에너지 효율화 • 기업 투자 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에 200억 파운드 • 교육, IT 등 지식인프라 구축 • 친환경 차량, 건물에 감세 • 부가세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에 260억유로 투입 • IT, 신에너지 등 전략산업 지원 확대 • 친환경차 구매 보조 • 가사서비스 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에 1000억 유로 • 교육 인프라에 집중 투자 • R&D 지원 확대 • 친환경건물 감세 • 가사서비스 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에 17조엔 투입 • 교육인프라 개선 • 친환경 주택 감세, 공공시설 태양열발전 지원 • 지방고용기금확충
EP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로제 (flexible working) 확대 시행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실업제 규제완화 • 기간제 고용규제완화 		
ALM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지원 및 실업보험 기능 통합한 윈스톱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지원센터 Jobcentre Plus 기능 활성화 • 장기실업자 위한 전국고용파트너십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지원 및 실업 보험 서비스 통합 고용센터 • 고용지원계약, 직업전환계약 확대 • 소기업 신규고용에 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고용서비스 인력 확충 • 취약계층 특별 훈련 프로그램 • 조업단축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고용 유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에 지원 확대 • 친환경, 복지, 교육 등 신고용 분야 발굴
사회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 감세 • 실업자 의료보험 지원 • 실업급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근로자 동등 대우 노사정협약 (2008.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생계 지원 확대 • 정규-비정규직 실업급여 격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감세 •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 인상 • 고용보험료 인하 • 실직자 생계지원확대 • 의료비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감세 • 자녀가족 수당 • 비정규직 고용 보험 혜택 확대 • 고용보험료 인하 • 실업급여 확대

▲ 미 경기부양법안의 주요 내용

부 문	재정지출						감 세
	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SOC 및 친환경건물	IT 인프라	실업자 의료보험	고용보험	기타	
투자액 (억불)	1,590	1,030	534	1,532	715	39	2,750

자료: 국제노동브리프 각호, 국제노동정책브리프 각호, 언론자료 등

① 지식경제기반 강화 + 재정확대에 의한 일자리 창출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을 노후화된 SOC 개선에 뿐만 아니라 교육, 정보통신, 친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에 투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예전처럼 단기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따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핵심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교육,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감세 등의 조치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및 건설 등의 분야를 육성함과 동시에 고용창출을 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② 고용친화적 산업 육성 + 여성 경제활동참여 촉진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가사서비스 지출에 대한 감세혜택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잠재수요가 큰 사회복지부문에서 신규고용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 방식으로 지난 2년간 24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③ 사회안전망 확충 + 출산을 제고 + 여성 경제활동참여 촉진

독일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지원금과 실업급여Ⅱ의 자녀지원금을 인상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함께 출산을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는 측면이 있다. 일본이 최근 취약 전 유아를 대상으로 ‘자녀와 가족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2) 세계은행의 경제위기 극복 전략

세계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해가 노동시장에 확산됨에 따라 실업자와 소득감소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국가 사정에 맞게 최적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먼저, 위기상황에서의 노동시장정책은 직업(Jobs)이 아닌, 근로자(Workers) 보호를 목표로 해야 하며, 노동이동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보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직업훈련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조와 통합 실시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기능수요에 맞춰 잘 조직화될 때 더욱 성공적이라 평가한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신규 노동시장진입자와 저숙련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임금보조나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다만, 보조금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중손실, 구축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고용보험제도에 관하여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에 차별적으로 권고한다. 사회안전망이 비교적 잘 갖춰진 중진국 이상의 경우 후진국형 공공근로보다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시스템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 평가한다.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은 수급자격을 완화하거나 수급기간 연장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동 제도가 없는 개도국은 단순화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소득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은 공공부문의 임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가능성이 희박한 저개발국에 적당하다고 본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행정능력이 취약하고 비공식 노동시장의 비중이 크므로 실행력 향상을 위해 조정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국제노동정책브리프 19호 참조).

3) 미 국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Wall Street의 동물적 본능(animal spirits), 2000년부터 이어진 금융규제 완화 등의 금융거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가구들이 거품을 수요하게 된 원인을 교육비, 의료비, 보육 육아비 증가 등 사회보장 측면에서 찾는 최근 연구들도 많다. 즉 2000년 이래로 급증한 사회보장비를 가구들이 충당하기 위해 주택을 현금자동인출기(ATM)처럼 사용하여 현금화하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리라는 전제하에 이를 조장한 금융 브로커들에 의해 거품이 키워졌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많다(2009년 1월 4일,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Meeting, San Francisc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eterodox Perspective). 후자의 의견을 따를 경우 미국경제 시스템은 단순히 금융시장의 규제강화 등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사회보장제도의 전면개혁 없이는 미래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재차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는 “Restructuring America”라는 슬로건 하에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과 연계한 적극적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을 보면 우선 총 재정지출 규모가 7,890억달러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최대규모라는 점도 그렇지만, 고용창출을 장기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전혀 없이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지원에 1,590억달러, 도로·교량 등 낙후된 SOC 개선과 연방정부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1,030억달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530억달러,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 지원 등 실업자 지원에 2,250억달러, 그리고 근로자 및 중산층 세금감면에 2,750억달러 등 지식경제기반 구축과 SOC 현대화, 취약계층 및 중산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재건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이전에는 관계부처에 따라 별도로 제공하던 고용서비스와 고용보험서비스를 하나의 창구(www.EconomicRecovery.gov)로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설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실직자와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보다 신속히 제공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에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일환으로서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에 대해 1인당 3,000달러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정책(일명, New American Jobs Tax Credit: NAJTC)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일 본

작년 12월 총 2조엔을 투입하여 14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신고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나 최근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자 총 15조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4. 10)을 내놓았다.

먼저 ‘신고용대책’의 내용을 보면, 미국과 달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고용창출 분야를 지정하기 보다는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긴급고용창출사업과 같이 자자체별로 필요에 맞는 고용대책을 수립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환경, 물류, 의료복지와 같은 특정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내수확대에 초점을 두고 집중 지원하는 이원화된 전략을 담고 있다.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은 지역의 안정적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성과에 따라 지역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긴급고용창출사업은 지방공공단체가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원을 확충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환경, 복지, 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신규고용에 연결되는 200여개의 사례를 작성하여 각 지자체가 참고사례로 활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 중에는 고령자 개호와 아동보육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복지시설 ‘플렉시블 지원센터’와 같이 복합고용전략에 해당되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기금에서 1조엔, 일반회계에서 1조엔, 총 2조엔의 재원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크게 고용유지대책, 취업지원대책, 그리고 신입사원 내정취소에 대한 대책으로 구분된다. 고용유지대책에는 파견근로자 등 계속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종전 6개월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훈련,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2/3)를 지원하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시에는 근로자 1인당 100만엔을 지급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파견-하청 구분기준의 적용을 명확히하여 하청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파견계약 해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중소기업 희생지원 전문가를 확충하고 사업양도 등의 행정절차를 개선하였다. 취업지원대책은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1년 이상 고용예정자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외에 수급기간 연장 확대, 재취

업 곤란 근로자에 대한 수급기간 60일 연장, 재취업수당·훈련수당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입사원 내정취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내정취소 기업에 대한 지도 강화(악덕기업명 공표), 내정취소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4월의 추가 경기부양책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스쿨뉴딜’에 따른 공립학교 건물 내진화와 공공시설의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 등 교육, 친환경에너지 등 신성장기반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연계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자녀와 가족지원수당’이 새로 마련된 것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출산을 제고,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등의 다목적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디지털TV나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주택 구입시 증여세 감면 등 내수진작에 많은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3. 단선고용전략과 복합고용전략에 대한 미시이슈별 평가

1) 경기부양

지난해 정부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가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경제성장률을 하향 전망하자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수정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5.1%감소한 이래 금년에도 생산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의 경기하강속도가 외환위기 때보다 빨라 실물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LG경제연구원, 2009. 2). 다행히 최근 들어 생산의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경기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통계청, 2009. 2)을 나타내 조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었지만 최근 한국은행(2009. 4)이 발표한 ‘2009년 경제전망(수정)’에 따르면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이며 ‘L’자형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경기회복은 내년 하반기에나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 기대대로 조기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감세와 부동산규제완화 및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한편 고용안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취업애로계층을 위해 단기일자리 제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감세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낮으며 토목공사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단기일자리 위주의 고용대책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일시적이며 하반기부터 ‘V’자형 경기 회복을 가정한 것인데, 정부 예상대로 ‘V’자형 경기회복을 이룬다면 단기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고용전략을 펼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대책은 지금과 같은 단순 경기회복형 전략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표 2〉 쟁점이슈별 단선고용전략과 복합고용전략

	한국의 단선고용전략	선진 복합고용전략
총괄 정책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 경기대응 • 시스템적 정책사고 부족 • 정책목표와 수단의 미스매치가 잦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산업경쟁력 강화와 고용전략의 복합연계추진 • 산업-훈련-정보-복지 정책의 networking 강화 • 정책입안시 고용효과 고려
경기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 • V자형 경기회복을 전제한 단기일자리중심 • 극빈-극부 집중형 복지외 감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과 노동시장 능동화(activation) • U자형 혹은 Bathtub형 경기침체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 중산층의 훈련-정보체계 효율화를 통한 산업경쟁력과 노동시장 activation 동시추구 • 훈련-정보-복지연계 사회안전망 강화/노동 시장 시스템 강화를 통한 유연안정성 추구
녹색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공사 중심 • 단기의 임시적 일자리 창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예의 선별 투자 • 신기술 및 지식기반 산업에의 투자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잡세어링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일적 잡세어링 • 대기업군 전방위 초봉 삭감(사회주의 색채) • 삭감된 재원 고용창출성과 불투명 •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부분도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세어링과 구조조정 선별 지원 • 공공부문과 공적자금투입된 은행권 초봉 삭감(세금지원으로 발생한 직업지대삭감/사후 초과지대발생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 민간부문의 임금-생산성 연계 강화 유도 • 효율적 구조조정에 대비한 촘촘하고 넓은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인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형 청년인턴제 • 청년인턴의 메뚜기형 단기경력자 양산/노동 시장 오명효과(stigma effect)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개발연계형 청년인턴제 • 숙련형성-정규직 채용을 위한 수습기간으로 청년인턴제 활용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실업증가가 두드러지므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여 당면한 고용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목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장기불황사례가 보여주듯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부담의 증가와 경기침체 지속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을 염두해야 한다. 단기일자리 중심의 고용대책보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교육,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같은 사회서비스영역을 공공부문 주도로 창출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그린카 같은 신성장동력 산업에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time lag)가 필요하므로 현 단계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사회서비스분야이다. OECD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현저히 낮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서비스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고용창출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분야의 취업유발효과는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훨씬 높으며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사회서비스분야 시장을 창출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전병유, 2007).

국가고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일자리를 상실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번 고용위기에서 취업 취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 실직자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 확대가 사각지대 최소화에도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정책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용서비스가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올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가 저소득층의 생활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뿐 아니라 근로의욕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서비스를 여타 다른 사회안전망 정책들과 연계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훈련-정보-복지가 연계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경우 노동시장 시스템강화를 통한 유연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것이다.

2) 녹색뉴딜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분야로 환경을 설정하고 친 환경 SOC 확충 및 녹색산업 육성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영국은 일자리 10만개를 목표로 학교재건, 병원사업, 철도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린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하였고 미국도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개발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New Apollo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세계 최초로 녹색뉴딜을 시작한 프랑스는 철도, 에너지 절약형 건물 등에 4천억 유로를, 일본은 환경비즈니스 시장을 키워 이 분야에서 고용인력을 220만명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녹색뉴딜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유력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도건우·이지훈·신창목, 2009).

우리나라 역시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을 발표한 후 2009년 1월 녹색성장전략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 역시 녹색(green)과 뉴딜(new deal)을 함께 묶어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녹색뉴딜의 주력 분야(핵심사업)는 녹색 SOC(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구축, 국가정보 인프라 등),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대체수자원·중소댐, 그린카·청정에너지, 자원재활용확대 등), 친환경·녹색생활(산림 바이오매스, 그린홈·그린빌딩, 녹색생활공간 조성 등)의 3개이며, 전체 36개 사업 분야에 2009~2012년간 총 50조를 투자하여 95.6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액을 보면 건설과 토목사업 비중이 높는데, 실업자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토목사업의 고용효

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고 고학력층이 두터운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녹색뉴딜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관련 R&D 예산은 2012년까지 3~4조원에 불과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지만 우리 경제의 미래와 성장동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나라에서 토목공사 중심의 녹색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과거 우리나라는 IT, 반도체, 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집중투자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바 있다. 경제위기시에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와 기술혁신,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국가의 내실을 튼튼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녹색뉴딜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건설투자 비중은 낮추고 IT나 SW와 같은 고학력자에게 적합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2배 이상 높고 고학력자에게도 적합한 일자리이다. 현재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실업자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3) 잡세어링/구조조정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인력감축이 본격화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가단위 일자리나누기가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고용위기시에 단기적이라도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일자리나누기이기 때문이다. ILO는 1982년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방안을 제시한바 있고 1980년대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하는 유럽국가들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은 하나의 일자리를 시간대별로 나눠 2~3명의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하여 실업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이기 때문에 워크세어링을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최근 발표된 OECD 2009년 통계연보(Fact Book)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OECD 평균(1,768시간)보다 1.3배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인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임금을 동결·삭감하는 사업장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만큼 노사정간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실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셈인데,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자리유지·나누기를 위한 노사의 실천 및 정부지원방안 등에 대한 노사민정합의문(2009. 2. 23)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일자리나누기 분위기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였고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임금절감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해 손금산입을 허용

하는 세제혜택 부여, 실업급여 및 퇴직금산정시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지원제도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잡세어링 확산정책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가단위 일자리 나누기는 유럽형 시장사회주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MB정부의 시장주의 패러다임과 배치된다. 다만 산업-업종-규모별로 섹터를 구분하여 구조조정-일자리 나누기-사회안전망 강화로 설계해 간다면 이는 조화로우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나누기 확산운동은 변종 일자리 나누기로서 일반적인 기업단위 방식과 다른 형태이다. 일자리나누기는 '임금인하형', '근로시간단축/임금감소형', '근로시간단축/임금유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손민중, 2009), 기본적으로 불황시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는 임금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사용자는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나누기는 초임 등 임금삭감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을 유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신입사원 초임을 최대 30%까지 깎기도 하였는데 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잡세어링과는 거리가 멀며 시장임금의 사회주의적 방식에 의한 삭감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셋째, 삭감된 임금재원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임금삭감을 발표하면서도 청년인턴 등 임시직 일부를 고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일자리나누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자리나누기가 자칫 풀타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는데, 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저임금 비정규직인 인턴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의 일자리나누기는 장기적으로 기업내 고용구조를 왜곡할 뿐 아니라 기업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임금삭감에 맞춰진 일자리나누기가 전방위로 확산된다면 내수 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고 불완전 취업계층을 늘려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현재 추진되는 잡세어링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일자리나누기보다는 개별기업에 맞는 맞춤형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단축과 임금인하형, 고임금 서비스업은 임금인하형 일자리나누기가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권은 초봉을 삭감하여 세금지원으로 발생한 직업지대를 삭감하고 사후에도 초과지대발생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민간부분은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회복기에 공공부문과 은행권은 삭감된 임금을 사후에 보전해 줄 것이 예상되지만 민간 대기업부분은 그렇지 못함으로 우수인재들이 직업지대를 쫓아 공공부문으로 자기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잡 세어링은 단기처방으로서 유효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하여 경제체질 개선을 저해하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나누기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청년인턴제

통계청의 2009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는 372천명으로 전체 실업자(924천명)의 40.3%를 차지하며 실업률은 8.7%로 전체(3.9%)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취업예로계층을 포함할 경우 체감 청년실업은 지표상의 청년실업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한계근로자 및 불안전취업자, 취업준비인구를 감안한 2008년 대체실업률(U6)은 17.58%로 청년층 공식 실업률(8.7%)보다 8.9%p 높다. 전체 인구는 공식실업률(U3)과 U6가 하락함에도 청년층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취업준비인구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에산정책처, 2008; 정상훈·이충언, 2008). 향후 청년실업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 2월 대학졸업자 56만명 중 31~39만명이 취업하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17~25만명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취업촉진, 교육훈련 등으로 18만명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채용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대졸자가 취업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정부는 청년층 실업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해에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2008. 4) 및 청년고용촉진대책(2008. 8)을 수립·추진하였고 올해에도 청년인턴 확대, 단기일자리 제공, 취약청년 취업지원,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등에 3,592억원을 투자하는 추경예산(2009. 3)을 편성한바 있다.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중 특징적인 점은 청년인턴을 청년층 일자리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청년인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당장 청년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실업자로 방치하기 보다는 단기일자리라도 제공하려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방식의 인턴제도는 메뚜기형 단기경력자를 양산할 뿐이며 장기적인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턴제도는 1985년 LG그룹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대학생들이 장래 취업에 대비해 재학기간동안 직장경험을 미리 쌓는데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적인 의미에서 보면 취업이나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 물론 일부 민간과 외국계기업에서는 인턴제도를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선발제도로도 활용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고 대부분 취업 전 직장체험을 통해 직업능력과 경력형성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청년인턴이 본질상 직장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턴제도를 청년층 실업대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제도정비 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인턴이 일자리 창출 취지에 맞는 제도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공부문이나 정부부문은 민간기업과 채용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선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인턴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민간부문 지원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초임자의 임금삭감을 전제로 인턴채용을 늘리기

보다는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될 필요가 있다. 즉, 민간기업 중 청년인턴제가 경력개발연계형으로 안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여 민간부문에서 청년층 고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턴과정이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를 익힐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인턴에게 무엇을 교육시키고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턴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인턴이 10개월 안팎의 단순한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인턴에 선발되었지만 정규직 취업가능성이 없거나 취업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할 경우 좀 더 만족스런 인턴자리로 찾아가는 비율이 높음은 그 증거이다. 이는 인턴경험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오명효과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인턴 참여자와 기업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턴이 숙련형성-정규직 채용을 위한 수습기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정인턴의 경우 지자체에 인턴 인건비만을 지급하고 강제 할당하는 단선적 방식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인턴을 활용한 사업계획서를 받고 고용창출에 중요도를 두고 심사하여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인턴의 인사관리상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턴 참여자의 실제 경력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회에산정책처 (2008), 『청년층 고용현황과 일자리창출』,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발간시리즈 제5호.
 국회에산정책처 (2009), 『일자리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1호.
 김승택 외 (2006), 『지식기반경제의 인력정책』, 을유문화사.
 김승택·허재준·조준모·전용일 (2008), 『고용과 성장』, 박영사.
 노동부, 「국제노동정책브리프 (2008)」, 제10호, 제15~28호.
 도건우·이지훈·신창복,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CEO information(제691호), 삼성경제연구소.
 박기성 (2008), 「노동산업과 지역파트너십」, 『노동리뷰』, 제10호, 한국노동연구원.
 손민중 (2009), 「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2009), 「제조업 경기하강속도 외환위기보다 빨라」, LG Business Insight(2009. 2. 11).
 유길상 (2009), 「고도 경기불황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방향, 고도 경기불황기의 사회안전망」, 한국사회보장학회, 국회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포럼 공동주최 세미나 발제자료(2009. 4. 10).
 전병유 외 (2005),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I)』, 한국노동연구원 2005-12.
 전병유 (2007), 「고용의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 『한반도 경제론』, 창비.
 전병유 (2008), 최근 고용위기와 고용정책의 방향 모색.
 정상훈·이충언,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국회에산정책처(경제현안분석 제28호).
 정인수 (2009), 「고용위기 진단과 한국경제 전망」, 『고용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국고용정보원.
 최영기 (200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타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역할과 일자리나누기방안

모색 토론회' 발표문.

통계청 (2009), 산업활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8년 7월, 12월, 2009년 1월, 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09), 「최근의 경기 동향에 비추어 본 고용대책 보완방향」.

Allard, G. J. and P. H. Lindert (2006), “Euro-Productivity and Euro-Job since the 1960s: Which Institutions Really Mattered?,” NBER Working Paper No. 12460.

Auer, P. (2000), “*Employment Revival in Europe: Labour Market Success in Austria, Denmark, Ireland and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Bassanini, A. and R. Duval (2006), “Employment Patterns in OECD Countries: Reassessing the Role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35.

Belot, M. and J. van Ours (2004), “Does the Recent Success of Some OECD Countries in Lowering their Unemployment Rates Lie in the Clever Design of their Labour Market Reform?,” Oxford Economic Papers, Vol. 56, No. 4.

Bertola, G., F. D. Blau and L. M. Kahn (2002),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Demographic Employment Patterns,” NBER Working Paper No. 9043.

Betcherman, G., K. Olivas and A. Dar (2004), “Impacts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New Evidence from Evaluation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Developing and Transition Countries,” World Bank Social Protection Discussion Paper, No. 0402.

Brandt, N., J.-M. Burniaux and R. Duval (2005), “Assessing the OECD Jobs Strategy: Past Developments and Reform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429.

OECD (1998), “The OECD Jobs Strategy: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96.

OECD (2001), “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Best Policy Practices”.

OECD (2006), *Employment Outlook: Boosting Jobs and Incomes*.

OECD (2008), *Economic Surveys: Korea*.